

李 정부 초대 내각 청문정국 개막...여야 강대강 충돌

여가위·과방위 등 곳곳 산화·정희野, 강선우 '보좌진 갑질 논란' 직격 與 "과도하게 의혹 부풀려져" 반박 전재수·정동영 청문도 공방 이어져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정국이 14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화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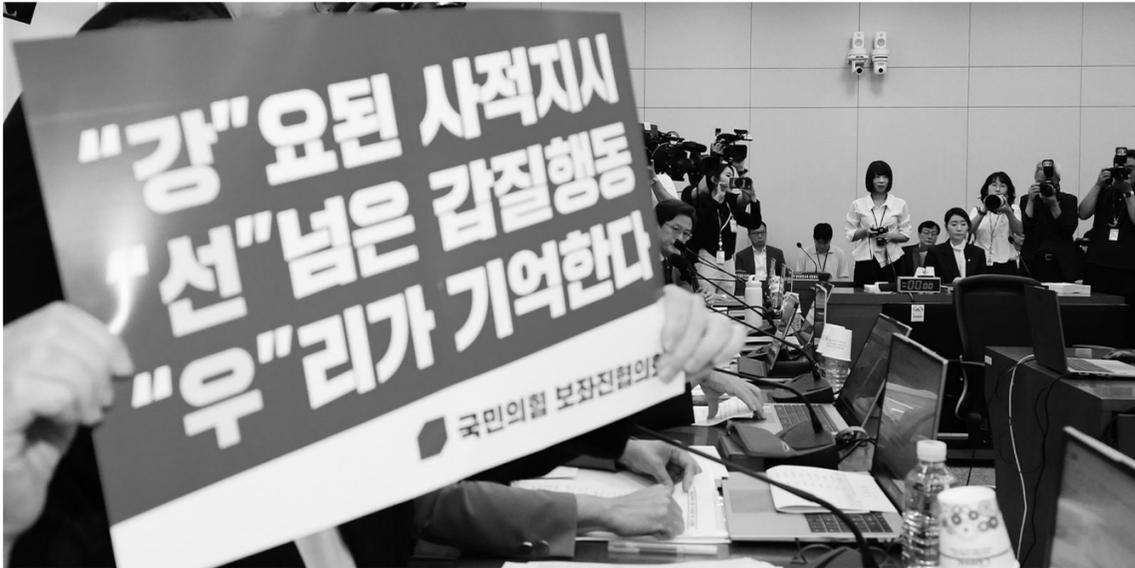
여야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극한 대치 속에 정면 충돌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오전 10시 2분께 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회의장 앞에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갑질 장관", "사퇴하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직격했다.

이달희 의원은 "갑질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없다"며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이라고 거세게 추궁



14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원실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수스럽게 생각한다"

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

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어 오갔고,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일단 멈췄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전 후보자가 부산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안 관리에 최적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농해수위 활동이 전무하다"며 업무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 등을 고리로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일주일간 뻘뻘하게 접혀 있는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국회는 앞으로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제정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李 대통령 "탈북민, 지역사회 일원 성장하도록 노력"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는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으며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터전에 뿌리내리시는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내 여러분께서 아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며 탈북민의 삶과 꿈을 응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의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행사는 '다름이 하나 되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경수 "균형 성장은 국가 성장이자 투자 전략"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새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간담회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속도"라며 "얼마나 속도가 있게 이 과제를, 특히 5극 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간담회에 자리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 균형을 지방 성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 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성장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尹 거부 농업 4법' 중 2개 처리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종덕 의원은 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 4법은 작년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정권 교체 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해수부 복수차관 도입 등 제안

전재수 장관 후보자 "적극 동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4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80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

선에 있지만 정착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며 "섬 주민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발취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에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부남, 오늘 국회서 보조금법 개선방향 토론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사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세금납비막은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과 경쟁 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 체계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가 발제하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세무·회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 이어진다. 또 납세자·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